

2021년 주요성과 홍보출간물 2022-01

# 이민정책 연구원



# MRTC

Migration Research & Training Centre



Migration Research & Training Centre  
이민정책연구원  
Partner Organization of IOM

# 이민정책 연구원



발행인 강동관  
발행처 이민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남로 93 양천빌딩 별관 2층, 3층  
T 02-3788-8000 F 02-3788-8098 H [www.mrtc.re.kr](http://www.mrtc.re.kr)  
발행일 2022년 5월  
디자인 (주)그루비즈 02-2278-9696

“

우리 연구원은 국내·외 산학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역량 강화와 이민분야의 정책 관계자 및  
연구자,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할 것입니다.

”



## 발간사

Preface

이 발간물은 2021년 연구원의 사업성과 및 2022년 주요 사업방향 등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민정책 분야 관계자 및 연구자, 학계 전문가들께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인구절벽의 시대를 현실로 체감하는 중입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1년 합계출산율은 0.81명입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2070년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는 7.5%, 생산연령인구는 46.1%로 감소하는 데 반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46.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출산·고령화는 사회 전체의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생산과 수요를 감소시킬 것이며,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잠재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경제성장과 경쟁력 저하를 불러올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민자의 유입·체류관리 및 사회통합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논의와 연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우리 연구원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이민자 유입·관리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국인과 이민자가 공존하고 공생할 수 있는 사회통합정책 연구와 개발은 물론 효율적인 이민행정과 거버넌스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와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국내·외 산학 관련 기관 등과 다각적인 협력을 추구하는 한편, 이민정책교육을 통해 이민정책의 확산과 이민자 수용성 증진을 위해 경주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이민정책 분야의 관계자 및 연구자,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는데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민정책연구원이 실천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이민정책 연구 및 개발과 교육·협력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2년 5월

이민정책연구원장 강 동 관

이민정책연구원은  
2009년 12월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이주기구(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간의 협정으로  
설립된 국제기구 협력기관입니다.



## CONTENTS

### I. 연구원 소개

- 01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08
- 02 주요연혁 09
- 03 비전 및 미션, 목표 10
- 04 조직도 11



### II. 2021년 연구원 사업 성과

- 01 연구원 4대 뉴스 14
- 02 연구사업 16
- 03 교육사업 30
- 04 협력사업 34

### III. 2022년 연구원 사업 방향

- 연구·교육·협력 사업 방향 44

# 연구원 소개

---

# I

01.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02. 주요연혁
03. 비전 및 미션, 목표
04. 조직도



# 01.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설립목적** 이주민 및 이주문제에 대한 국제적 이해 증진  
 연구, 정보교환, 조사 및 이주 관련 교육을 통하여 국가들의 이주정책 개발에 기여  
 국제이주법, 이주관리 및 이주민의 인권에 관한 훈련을 통해 국가들의 역량 향상  
 이주와 개발, 환경, 안보, 인권 및 고용 간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 증진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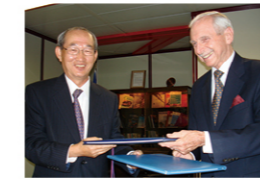
## 주요기능



# 02. 주요연혁



**2007.11.**  
 법무부장관, 경기도지사, IOM사무총장 간  
 연구원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2009.7.**  
 대한민국 정부와  
 IOM 간 설립협정 체결



**2009.12.**  
 IOM이민정책연구원  
 개원

**2010.3.**  
 Charles Harns 초대  
 원장 취임

**2012.3.**  
 국제 메트로폴리스 프로젝트  
 아시아 사무국 유치

**2014.7.**  
 대한민국 정부와 IOM 간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정 체결



**2014.9.**  
 장준오 제2대 원장 취임



**2015.1.**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제1지원단 선정

**2017.1.**  
 정기선 제3대 원장 취임



**2019.11.**  
 개원 10주년  
 기념 행사 개최



**2020.1.**  
 강동관 제4대 원장 취임



**2021.12.**  
 IOM 한국대표부 및  
 서울시와  
 IOM 70주년 기념행사

### 03. 비전 및 미션, 목표

- 비전**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이민정책 연구·교육 전문기관
- 미션** 정부와 지역사회, 내국인과 이민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이민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와 교육 수행

**목표**



### 04. 조직도



**조직도**



# 2021년 연구원 사업 성과

---



- 01. 연구원 4대 뉴스
- 02. 연구사업
- 03. 교육사업
- 04. 협력사업



# 01. 연구원 4대 뉴스

2021

이민정책연구원 4대 뉴스

## 이민정책연구원-법무부 <제14회 세계인의 날> 기념 이민정책 포럼 개최

정부가 정한 <세계인의 날 (5.20일)>을 기념하여 연구원은 매년 이민정책포럼을 개최해오고 있다. 금년 포럼은 6월 2일(수)에 개최하였으며, 지난 포럼과 달리 국내 이민정책 주요 학회(한국이민학회,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하여 운영하였다. 특히 2021년은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18-2022)>의 완료를 앞두고 제4차 기본계획의 수립을 준비하는 시기로서 중요하므로, "제3

차 외국인정책의 성찰과 제4차 외국인정책의 방향"이라는 대 주제 하에 이민정책의 거시적·미시적 현안-이민정책 조직개편, 이민통합기금, 이민정책 평가체계, 인구와 이민정책, 인권과 이민정책, 국적과 이민정책, 이민자 관점에서 본 이민정책 등을 망라하여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포럼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들은 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반영되도록 하였다.



## 이민정책연구원-IOM 한국대표부-서울특별시 <세계 이주민의 날> 기념 공동 행사 개최

'세계이주민의 날(12.18)'을 맞이하여 『세계 안의 서울, 서울 안의 세계』를 주제로 서울시와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 연구원이 2021년 12월 10일(금) 제34회 외국인주민

서울타운미팅과 국제이주기구 설립 70주년 축하 기념행사를 공동 주최로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서울시와 살고 있는 외국인 주민의 삶과 경험을 공유하고,



이주민의 실생활에 기반한 정책을 위한 서울시와 국제사회의 역할을 모색하였다.

2021

이민정책연구원 4대 뉴스

## 이민정책연구원-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MOU 체결 및 공동 포럼 개최

이민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은 앞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이민정책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27개 기초자치단체의 정책협의회)와 MOU를 체결하고, 지자체 기반 이민정책 연구와 교육 및 세미나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를 계기로 연구원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의 연례포럼을 11월 19일(금)에 개최하였다. 특히 2021년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출범 10주년이 되는 해로,



연구원에서는 이민정책 추진에 있어서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의 역할과 전략적 발전방안을 제안하였다.

## 이민정책연구원, <제1회 이민정책연구 논문공모전> 개최

국제이주, 이민, 외국인, 다문화 등 이민 관련 연구에 관심이 있는 신진연구자를 발굴하고 연구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제1회 이민정책연구원 대학(원)생 대상 이민정책연구 논문공모전」을 2021년 7월 12일(월)부터 9월 30일(목)까지 개최하였다. 논문공모

전 대상은 '젠더관점에서 분석한 한국 내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특성 (이주연, 서울대)'이며, 이 밖에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등 총 4편을 우수작으로 선정하였다.



# 연구사업 실적



## 02. 연구사업



### 연구보고서



#### 국내 외국인주민 증가와 범죄발생 간 상관관계에 관한 실증연구

연구책임자 김도원 공동연구자 변재욱



- I. 서론
- II. 선행연구 검토
- III. 한국의 외국인주민과 범죄 발생 현황
- IV. 실증분석: 패널 회귀분석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국내 외국인주민 증가와 범죄발생 간 상관관계를 지역 단위 패널자료 구축을 통해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2010년~2019년간 발생한 지역별 외국인주민의 증가가 지역 범죄 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함으로써, 그간 지속되어 온 외국인 범죄에 대한 언론보도 패턴과 국민 인식이 지나치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부각된 것은 아닌지 검증하였다. 광역지역 및 시군구 자료를 이용한 패널회귀분석 결과, 지역별 외국인주민 규모 증가가 직접적으로 범죄 발생 증가를 초래한다는 실증적 증거가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았다. 전통적 경제학 이론을 바탕으로 볼 때,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주민 역시 소득수준, 주거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효과적인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 방향은 외국인에 대한 직접 통제보다는 전반적인 지역 치안 수준 제고와 함께, 소득수준과 생활여건이 열악한 외국인주민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 및 사회보장 정책에 초점을 두고 설정되어야 한다. 아울러, 그간 간과되어 온 외국인주민의 범죄 피해자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통계자료의 보완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이민정책 방향: 수용가능이민과 지역기반의 이민행정을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이정우, 유민이 공동연구자 신선미, 최효원



- I. 서론
- II. 인구구조 변화와 이민정책 환경
- III. 수용가능이민에 의한 이민행정
- IV. 이민정책의 방향 전환
- V. 결론 및 제언

전환과 위기의 시기에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선도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이민정책의 방향을 찾고자 한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기존의 국가주도형 이민행정체계를 혁신하기 위하여 수용가능이민이라는 개념을 개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지역기반의 이민행정 실현을 정부에게 제안한다. 지역기반의 이민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첫째 '지역기반 이민행정 플랫폼' 모형을 제시하고, 둘째 정보와 업무의 공유네트워크에 기반한 지역협력거버넌스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셋째 정부 주도의 외국인력 공급체계를 개편하여 적시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인력 공급체계를 제안하였다. 넷째 지역기반의 이민행정 실현에 들어가는 자원 등을 확보할 수 있게 이민정책기금을 신설하도록 권고하였다. 다섯째 지역기반의 이민행정을 실현하고 국가의 미래를 고려하여 이민사회를 준비하면서 이민정책을 총괄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는 조직의 신설도 제안하고, 여섯째 사용자 중심의 이민통계정보 시스템을 개발과 일곱째 하나의 통일된 이민법령체계를 갖추도록 제안하였다.



### 이민자 패널조사 구축을 위한 탐색적 연구

연구책임자 김도원 공동연구자 이창원, 최서리, 박민정, 신혜원, 현채민



본 연구는 국내 이민자 패널조사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조사 구축을 위한 사항들을 검토하는 사전적·탐색적 연구의 성격을 가진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패널조사 및 중단연구가 수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외국인 200만 시대에 도래한 현재까지 국내에는 이민자 대상 패널조사가 부재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 주요 국가의 이민자 패널조사, 국내 주요 외국인 대상 실태조사, 국내 주요 패널조사 사례들을 폭넓게 검토함으로써, 국내 이민자 패널조사 구축의 필요성 및 패널조사 구축에 필요한 각종 사항을 사전적으로 확인하고,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민자 패널조사 구축을 위한 논의의 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I. 서론
- II. 해외 주요국의 이민자 패널조사 사례
- III. 국내 외국인 대상 주요 실태조사 사례
- IV. 국내 주요 패널조사 사례
- V. 이민자 패널조사 구축의 기초
- VI. 결론 및 제언



### 언택트시대 지방자치단체 정주형 여성이민자 활용 방안

연구책임자 박민정 공동연구자 육수현, 장흥성, 김민경



본 연구는 인구 고령화 시대를 맞아 지방의 생산인구 확보 방안의 하나로, 정주형 여성이민자를 활용하여 온라인 콘텐츠 유관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지역형 모델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인구소멸위험 지역 중 하나인 경상북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레이디 사업의 온라인 콘텐츠 사업을 교육콘텐츠, 경제콘텐츠, 정보제공콘텐츠로 유형화하고 각각 사업의 지역사회 활용 가능성을 탐색해 보았다. 또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통하여 자원 및 인력 현황 및 사업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점을 파악하여, 지역사회 주체들의 역할을 부여하고, 각각의 주체가 참여한 이주인력 활용 협력 모델을 제시하였다.

- I. 서론
- II. 국내외 이민자 창업 관련 지원 및 사례
- III. 여성이민자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교육
- IV. 지역 중심 콘텐츠 제작 및 활용을 위한 조사
- V. 결론 및 제언



###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자격 통합에 대한 연구

연구책임자 이창원 공동연구자 최서리, 권채리, 박미화, 조하영



이 연구는 같은 외국국적동포임에도 불구하고 권리와 활동에서 차이를 두고 있는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자격의 이원화된 체계가 국내에서 작동하는 방식 및 현실 적합성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두 제도의 발생 배경과 연혁, 그리고 운영현황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한 실태 분석을 통해 방문취업자(H-2)와 재외동포(F-4)의 실제 취업활동이 제도가 의도한 대로 구분되고 있는지 조사한다. 4장에서는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자격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한다.

- I. 서론
- II. 재외동포정책의 전개와 현황
- III. 국내 중국 및 CIS 동포의 취업 실태
- IV. 재외동포정책 개선 방향
- V. 결론



### 이민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행정 수직·수평적 협력거버넌스

연구책임자 조영희 공동연구자 이혜경, 고상두



최근 외국인주민 정책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외국인주민 정책에 있어 지자체의 '주도성'은 간과되고 중앙정부의 '협조자'로서 간주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외국인밀집지역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민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과 협력이 더욱 중요해 질 것이 분명해 보인다. 본 연구는 중앙과 지자체 간의 수직적 협력과 지자체 간의 수평적 협력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와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두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와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는 조직 설립의 추동력이 서로 다르지만, 이 두 사례를 통해 중앙정부와의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다양한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수직적 협력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자체 간의 수평적 협력을 위해서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와 회원도시 규모를 확대하고 외국인밀집지역 지자체의 공동 현안들에 대한 정책공유와 상호 학습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주민 원스톱 행정조직으로서 중앙부처 공무원이 지자체에 파견되어 있는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의 경우, 해당 지역의 외국인주민에 대한 정책 효율을 총괄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보다 주도적으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제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I. 서론
- II. 협력거버넌스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 III.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정책의 환경 변화와 협력 필요성
- IV. 수직·수평적 협력거버넌스 가능성 탐색: 사례 분석
- V. 결론 및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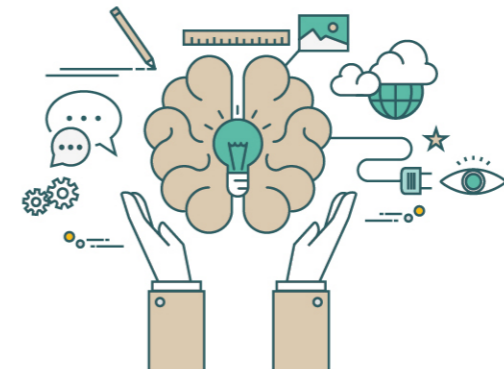
### 외국인 대상 코로나19 정부대응 현황과 평가: 이주거버넌스 지표(MGI)를 적용하여

연구책임자 유민이 공동연구자 박민정, 정기용



국제이주기구(IOM)에서는 이주거버넌스 지표(MGI) 중 코로나19 시기 정부의 대응을 평가하는 지표를 선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지표 중 9개의 지표를 적용하여 한국의 외국인대상 코로나19 정부의 대응 변화과 평가를 살펴보았다. 한국정부는 감염병 위기 시기 비자제도의 유연한 적용이나 의료서비스에 대한 내국인과의 차별없는 접근성 등에 있어서 성과를 보였다. 한편 신규 입국 외국인에 대한 입국조치의 실행, 실업급여 및 재난지원금 등 사회안전망 접근성, 외국인 의료진 인프라, 코로나19 관련 외국인 데이터 관리 및 공개 등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다. MGI 외에도 사람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국제사회 협력 노력, 감염병 등 위기관리계획에 외국인을 포함해야 하는 문제, 감염병 관련 외국인에 대한 혐오 및 허위뉴스에 대한 대응 등에도 개선이 필요하였다.

- I. 서론
- II. 외국인 대상 위기관리 이론 및 제도적 배경
- III. 외국인 코로나19 관련 현황 분석
- IV. MGI를 적용한 외국인 대상 코로나19 대응 평가
- V. 외국인 위기관리의 개선방안



연구총서



- I. Background
- II. Immigration Policies and Governance System
- III. Migration Trends
- IV. Economic Activities of Migrants
- V. Domestic and International Migration Trends of Koreans
- VI. Conclusion

**Korean Migration Profile of 2020**

연구책임자 강동관



2019년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250만 여명으로 1990년의 49,500명과 비교하면 30년 사이에 한국의 체류외국인이 약 50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급격한 이민자수의 증가와 국내외의 이민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한국정부는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관리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해 왔다.

OECD, IOM, ILO, World Bank 등에서 한국의 이민자 및 이민정책 현황에 대해 부분적으로 발표된 자료들이 있으나, 10년 전 2011년에 본 연구원에서 '대한민국 이민정책 프로파일'을 발간한 이후 이민현황과 정책동향 전반을 아우르는 보고서는 부재하였다. 따라서 이에 부응하는 한국의 이민현황 및 정책에 대한 포괄적이며 정확한 동향을 포괄적으로 업데이트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본 이민정책 프로파일은 2012년 IOM이 발간한 Migration Profile: Making the Most of the Process의 Part II: Framework for Developing a Template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6장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1장에서는 대한민국에 대한 최근 10년간(2010-19)의 국가의 기본 정보를 실었고, 2장에서는 주요 이민 정책과 추진 체계 현황을, 3장에서는 10년간(2010-19)의 국내 비자별 주요이민제도 변화와 체류 동향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4장에 2017-19년간 발간된 외국인 고용조사를 근간으로 외국인의 경제활동을 소개하는 한편, 5장에서는 내국인의 국내·외 이주 동향을 소개하였으며, 6장은 한국의 이민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정책보고서



- 1. 서론
- 2. 선행연구 검토
- 3. E-9에서 E-7-4로의 교육체계 현황 분석
- 4. E-9에서 E-7-4로의 교육체계 실태 파악
- 5. 정책제안

**단순기능인력에서 숙련기능인력으로의 질적 확대: E-9에서 E-7-4까지의 교육체계 연계 방안**

연구책임자 강정향 공동연구자 조영희



이 연구는 한국사회의 필요인력 확보차원에서 2017년부터 시행되어 온 단순기능인력(E-9)에서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체류자격을 전환하는 점수제 숙련기능인력제도의 질적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숙련기능인력의 수적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질적 확대 수단으로 '업무숙련도'와 '사회통합수준' 제고 측면의 외국인근로자의 교육·훈련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E-9에서 E-7-4로의 교육체계를 분석하였고, 이 제도의 당사자(E-7-4)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와 관련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숙련기능인력(E-7-4)이 되기까지의 참여교육 실태 파악 및 동 제도 시행에 따른 애로점과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코로나19시기, 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역할제고방안**

연구책임자 최영일 공동연구자 조영희



- 1. 서론
- 2. 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설립과 지역적 특성
- 3. 코로나19시기 외국인주민지원현황의 변화
- 4. 정책제안

이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사업수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실적데이터 분석을 통해 분야별 사업 수행의 어려움과 대안, 서비스전달체계에 있어 어려움에 직면한 체류유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사업을 교육사업, 상담사업, 문화사업, 공동체사업, 복지사업으로 유형화하여 각 사업별로 코로나 이전과 이후 사업실적을 비교 분석하였다. 코로나19시기에 분야별 보완점과 대안 나아가 새롭게 대두되는 방역과 통역 서비스 수요 및 연계 사업의 필요성, 새로운 정책수요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센터들 대부분 사업실적이 감소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어를 비롯한 교육사업은 온라인으로 전화되었고 접촉기반 사업인 공동체 활동, 세계인의 날, 캠프, 찾아오는 세계시민교육 등은 대부분 중단되거나 비대면 사업으로 전환되었다. 이주민들의 건강권을 위한 무료진료사업 및 쉼터사업 역시 중단 혹은 축소되었다. 특히 성인에 비해 이주배경자녀들을 위한 교육사업, 미등록체류자 가정 자녀들과 난민신청자 가족, 고려인가족의 자녀 등은 기존 돌봄서비스 제도 즉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배제되거나 기회를 얻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다. 이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동포, 외국인노동자, 난민, 미등록체류자를 포함한 방역 및 소통과 긴급지원 등, 지역사회외국인주민 대상 사회적 안전망 조성을 위한 주요한 전달체계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팬데믹 이후에 경기도 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역할제고방안 및 정책개선과 자치법규의 제정과 개정 등의 합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동·청소년 대상 문화다양성 교육 현황 진단 및 주요국 사례 연구**

연구책임자 박민정 공동연구자 심수민, 이은정, 정혜경



- 1. 서론
- 2. 문화다양성 교육 현황
- 3. 주요국 문화다양성 교육 사례
- 4. 정책적 시사점

최근 이민자에 대한 정책의 방향이 사회통합 정책으로 수렴되고 있는 반면 국민의 수용성은 정체되어 있는데 그 원인 중 하나는 체계화된 교육의 부재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기부터 각 학령기에 맞는 꾸준한 교육이 필요하지만, 현재 대부분은 일회성 특강 교육 외에는 진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국내 문화다양성 교육의 현황을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서울시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학령기별 체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독일, 캐나다, 호주의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의 사례들을 발굴하여 한국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토대로 향후 실제 활용 가능한 교육콘텐츠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워킹페이퍼

난민 유사상황에 대한 대안적 국제보호 연구

연구책임자 장주영 공동연구자 김희주, 김수경



- I. 연구의 배경
- II. 인도적 체류 허가 현황
- III. 대안적 방식의 보호 제도
- IV. 대안적 방식의 보호 제도의 합의
- V. 결론 및 제언

세계적으로 협약 난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유사한 상황에 처하여 국제적인 보호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어, 각국에서 이들에 대해 보호를 제공할 의무를 이행할 것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대안적 방식의 보호(complementary forms of protection) 중 대표적인 방식인 보충적 보호(subsidiary protection), 보완적 보호(complementary protection), 임시 보호(temporary protection)의 배경과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각각에 해당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의 사례를 탐색해보았다. 보충적 보호의 사례로는 스웨덴과 아일랜드, 보완적 보호의 사례로는 캐나다와 호주, 임시 보호의 사례로는 미국을 제시하였다. 보충적, 보완적, 임시 보호의 개념과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도적 체류 허가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결론에 제시하였다.

지역특화형 특별지방행정기관 역할개편 모색: 지방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을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유민이



- I. 서론
- II. 지역특화형 특별행정기관에 관한 논의
- III.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유형화
- IV. 지역특화형 지방출입국외국인관 역할 및 조직개편안 제안
- V. 결론

체류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관리 등 행정업무 수요 역시 상당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집행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지방 출입국기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외국인과 관련한 일선행정을 담당하는 지방출입국기관의 현황과 주요 기능을 분석하고, 기존의 출입국행정 외에 지역별로 차별화된 역할개편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향의 개편이 바람직한지 모색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지역유형을 외국인정책과 관련한 지역의 인프라수준과 출입국행정 서비스수요를 기준으로 4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그리고 각 유형별로 향후 특화할 출입국기관의 기능을 선정하였다. 즉, 출입국기관 고유의 기능에 더욱 집중해야 할 고유기능형, 행정수요 적극대응형, 정주형 이주민에 대한 통합기능 확대 등의 영역확장형, 신규 유입 이주민에 대한 지역인프라 연계 업무 중심의 지역협업형 등으로 특화하여 구체적 역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특별행정기관의 지역특화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책브리프

이민분야 공공데이터 현황과 빅데이터 구축과제: 법무부 데이터와 고용·교육 데이터 연계를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최서리 공동연구자 유민이, 김영근



- I. 서론
- II.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데이터 현황
- III. 이민분야 기타 공공기관 데이터 현황: 고용과 교육영역
- IV. 이민분야 데이터 활용
- V. 이민분야 빅데이터 구축을 통한 행정 및 정책과정 지원

이 정책브리프는 현재 외국인에 관하여 가장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데이터 현황을 살펴보고, 범정부 데이터정책에 발맞추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통해 공익을 제고하기 위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지향해야 하는 데이터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러한 방향성 하에서 추진해야 하는 구체적 과업을 논의한다. 특히 외국인·이민 빅데이터 구축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고용과 교육영역 데이터와의 연계를 예시로 다룬다. 고용과 교육영역 데이터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데이터와 연결 시 이민분야 연구 및 정책 수립·운영에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슈브리프

바이든 정부의 이민정책 방향

연구책임자 장주영



바이든 정부의 이민정책은 매우 보수적이었던 트럼프 정부의 정책과는 달리 역대 정부 중 가장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 브리프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이민정책을 간략히 정리하고, 바이든 정부의 이민정책 기조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이와 함께 핵심적 정책 사안인 미등록 청소년, 임시보호 대상자, 미등록 농업 분야 이주노동자의 정주 기회 제공을 위해 제출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였다.

외국인과 코로나19 백신정책

연구책임자 박효민



백신 보급을 통해 코로나19의 어둡고 긴 터널의 끝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백신 접종에서 체류자격으로 인한 차별이 이루어진다면, 인도주의적 측면과 아울러 한국사회의 집단방역체계를 구축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등하고 보편적 접종 원칙에 따라 한국에서도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 한국인의 이민정책에 대한 태도

연구책임자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에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이민정책 사안에 대해 자체 연구나 정부의 연구용역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브리프에서는 국적, 가족 초청, 난민의 세 가지 이민정책 영역에 대한 최근의 태도 조사 결과를 소개하였다.



### 이주민 건강과 건강권 제고

연구책임자 장주영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이주민의 건강권에 대한 논의가 세계적으로 활발해지게 되었다. 이주민이 보건의료서비스에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는 감염병 상황하에서만 아니라 평시에도 접근성을 보장하는 보건의료체계의 구축과 운용이 중요하다. 이 브리프에서는 이주민 건강 및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과 관련된 요인들을 짚어보고, 이주민 건강권 제고를 위한 제언을 첨부하였다.



### 해외의 이민자 사회통합 지표동향

연구책임자 고상두



이 글에서는 해외에서 개발되고 있는 사회통합지수와 측정지표를 살펴보았다. 최근의 지표개발 동향을 살펴보면, 이민자 정책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포괄적 지수가 늘어나고, 평가지표가 일회용이 아니라 지속적 평가에 쓰이며, 그 과정에서 수정 보완되고 세부 지표의 양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정책도 함께 평가되고 있다.



### 코로나19와 지역사회통역(Community Interpreting) 질 제고 방안

연구책임자 최영일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지역사회 통·번역의 수요가 증가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 등의 통역서비스 지원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수요와 공급의 증가와 함께 통역의 질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역사회통역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국가차원의 통역 인증제 도입, 이민자가 갖고 있는 언어 다양성 자원에 대한 인식제고 등 지역사회통역의 질 제고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국가 정황 정보 조사의 합의와 방향에 대한 제언

연구책임자 박서연



한국은 2013년 난민법 제정 후 난민 신청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난민 신청인 출신 국가와 난민 신청 사유도 점차 다양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국가 정황 정보가 난민 신청인의 지위 결정을 하는 데에 충분조건은 아니나, 난민 심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국제적 보호라는 관점으로 난민 심사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전문성 있게 구축하는 것은 현 난민 제도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방안이 될 것이다.



### 재정착난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과제

연구책임자 채보근



한국정부는 2013년 난민법 제정 이후, 해외에서 이미 난민으로 인정된 자를 안전한 제 3국으로 이동시키는 재정착난민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가 먼저 수용방침을 결정하여 우리사회로 들어온 재정착난민이 지역사회에서 잘 정착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문제는 한국난민제도와 정책의 전반적 성패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재정착난민의 정착을 위해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와 시민 봉사자 등의 유기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 경제행위자로서 결혼이민자

연구책임자 육수현



2000년 후반부터 늘어난 국제결혼은 한국사회를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게 하였다. 그런데 국제결혼을 통한 결혼이민자에 대한 시각은 여전히 가정 안의 어머니, 며느리, 아내의 역할에만 매몰되어 있다. 독립된 경제행위자가 아닌 가족에 의해 그리고 가족을 위한 노동참여자로만 바라보는 시각은 결혼이민자를 위한 직업교육, 취업 분야에 대한 고민과 지원을 막고 있다.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결혼이민자가 사회경제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은 가족 내 정체성만이 아닌 노동자로서의 정체성까지 고려해야 한다.



### 중도입국 청소년 현황과 과제

연구책임자 김현숙



다문화 청소년 관련 논의에서 중도입국 청소년 문제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속한다. 다문화 청소년의 일부가 아닌 중도입국 청소년 자체 연구는 2010년경부터 시작되었으나 여전히 정확한 현황 파악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중도입국 청소년의 부족한 한국어 실력은 다양한 한국 생활 어려움을 확대·재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강화된 교육권 보장으로 어려움 해소를 기대한다.



### 점수제 체류자격 변경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확대 방안

연구책임자 유민이



이 이슈브리프는 외국인정책을 둘러싼 환경에서 '인구'와 '지역(지방자치단체)'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두 키워드를 동시에 제도권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역의 수요를 보다 가까이에서 파악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체류자격 제도설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점수제를 통한 체류자격 변경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점수를 배점 또는 가점항목에 포함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 다문화사회전문가제도와 관련한 쟁점과 대안

연구책임자 남기범



체류외국인 250만,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절벽의 가까운 미래를 대비하여 이민정책이 중요해지고, 다문화사회전문가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다문화사회전문가와 관련한 법적 기반의 개선, 명칭개정, 정책목표의 명확화, 중장기 로드맵의 마련, 인정과목 교재와 강사진 양성, 과목인정에서의 이슈, 공급과잉의 해소에 대응해야 함을 논의하였다.



### 지역 내 외국인 규모를 반영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원 확보: 경기도 안산시 사례

연구책임자 김도원



저출산·고령화의 지속에 따른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인구소멸에 대한 우려가 점차 증대되는 상황에서, 지역 내 외국인 유치와 정착이 하나의 대안으로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내 외국인의 유치 또는 정주화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각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외국인정책의 시행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외국인정책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본 브리프는 지역 내 외국인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재원 확보 이슈를 대표적인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 중 하나인 경기도 안산시의 성공적 사례를 통해 간략히 살펴보고, 외국인 유치와 정주화를 고려 중인 다른 지자체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각국 센서스의 이주문항의 현황 및 한국 센서스에서의 시사점

연구책임자 박효민



한국사회에 이주민이 대량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지 한세대가 넘어가고, 사회 내 이들의 중요성도 높아졌지만, 한국의 가구, 개인 대상 조사통계들에서 이주배경 문항은 매우 제한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센서스에서 이주배경 문항은 다른 이주사회와 비교해 보았을 때, 질문의 수와 내용적인 측면에서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한계가 있다. 국내의 정책적 수요나, 국제사회의 통계지표 제공을 위해, 사회조사의 지표가 되는 센서스에서 이주배경 문항에 대한 보다 세분화된 조사 설계가 필요하다.



### 증거기반 이민정책을 위한 이민정보 전문기관 설치 필요성 및 데이터 관리방안

연구책임자 유민이 공동연구자 김준형



이 브리프에서는 증거기반 정책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는 시점에서 이민관련 정보와 데이터가 '좋은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향후 관리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독일의 IZAM, 캐나다의 IRCC에서 다루는 이민(자)관련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한국에 이민정보 전문기관이 설치된다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세 가지 과제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제시하였다. 브리프를 통해 보다 전문적이며 객관적인 증거기반 이민정책과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국내 이민자 유입규모 관리에 관한 논의

연구책임자 최서리



한국의 이민정책은 점차 한시이민 위주에서 영주이민 확대로 전환기에 있고, 향후 영주이민정책을 운영함에 있어서 한시이민정책과의 균형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의 영주이민제도는 신청자의 자격요건 심사만으로 이민자의 정착이 결정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신규 영주이민자의 유입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는데, 이러한 제도 설계를 통해서 영주이민자들이 한국의 여타 정책(산업, 노동, 교육, 사회보장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다. 영주이민의 예측가능성, 그리고 한시이민과의 관련성 측면에서 정부는 향후 이민자 유입규모 관리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외사업무의 사각지대

연구책임자 이해경



국제 이민환경 변화는 테러, 불법이민 문제 등을 수반할 수 있고 국민과 이민자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정부의 효율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노력이 요구된다. 그동안 한국은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외사경찰이 정보수집과 수사업무를 담당해왔다. 그런데 최근 경찰법 개정으로 국가경찰,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외사경찰의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고 제도변화가 이루어졌다. 이에 이민사회 안전과 관련된 특수영역인 외사업무의 사각지대 발생이 충분히 예상되어 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경찰법 개정을 통해 외사경찰에게 수사권한을 다시 부여하는 등 사회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 팬데믹 전후 외국인 관련 언론보도 경향분석: 사건사고 보도를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김도원



코로나19 발생 이후 약 2년여의 짧은 기간 동안 우리 생활의 지형도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 체류외국인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방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본 이슈브리프는 코로나19 발생 전후 시기의 외국인 관련 언론보도 경향을 사건사고 기사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팬데믹 상황을 겪는 과정에서 국내 언론의 외국인에 대한 보도 경향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관찰하고, 팬데믹 이후 내-외국인 간 사회통합과 언론의 역할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 중양아시아 독립이 고려인 동포에 미친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연구책임자 송석원



2021년은 중양아시아 각국이 소비에트연방 해체를 계기로 독립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중양아시아 각국은 독립 이후 국가건설에 몰두한 결과, 내셔널리즘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중양아시아 고려인 동포사회에도 큰 변화를 초래했다. 세계로부터 '책임 있는 역할'을 요청받고 있는 우리나라는 현지 고려인 동포, 특히 차세대 젊은 고려인의 역량 강화와 연계된 대중양아시아 정책 과제를 설정하고 추진해야 한다.



### 이민기금 조성을 위한 선결과제

연구책임자 유민이



이 브리프는 이민정책과 관련한 기금설치에 관한 논의들을 살펴보고, 현실적 여건에서 기금이 설치되기 위한 조건을 『국가재정법』 및 기획재정부의 '기금존치 평가기준'에 비추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민기금은 수익자부담의 원칙 뿐 아니라 원인자부담의 원칙을 병행하고 기존 일반·특별회계출연금 및 타 기금의 이관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안정적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이민기금의 용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정착 및 통합사업 뿐 아니라 이민자의 유입 및 생산가능인구 확보 관점의 이민정책 역시 포함되어야 설치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CBDR)'에 기반한 체류관리: 다부처 협력을 통한 '불법화' 대응

연구책임자 한준성



정부의 외국인 체류관리는 '안전 메커니즘'의 특징을 보이며 '불법화(illegalization)'에 대한 엄정 대응이 강조된다. 문제는 법무부가 거의 전적으로 '불법화' 대응의 책임을 떠안고 있는 불합리한 책임분담 구조다. 이에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CBDR,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을 '불법화' 대응을 위한 다부처 협력에 적용해볼 것을 제안한다. 핵심은 법무부를 비롯해 유관 부처들이 각자의 업무 영역에서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체류관리와 연계해 활용하는 것이다.



### 지역 중심 유학-취업 연계 방안 모색

연구책임자 이창원



정부의 2기 인구정책TF에서는 유학생의 국내 취업 촉진과 인구감소지역의 외국인력 유치로 정책목표로 제시하였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유학생을 유치하여 졸업 후 지역 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 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지역 중심의 학업-취업 연계 프로그램 신설을 제안한다. 특히 유학-취업 연계 프로그램에서 각 지역 전문대학 활용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한편 이 프로그램은 지역의 노동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과 인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지역 중심 협력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출입국관리직 공채시험 전문과목 도입의 필요성

연구책임자 이해경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은 법무부 및 공항, 항만 등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외국인 업무를 관리하는 국가직 공무원이다. 그동안 출입국관리직 공채시험에 직무 연관성이 높은 과목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전문시험과목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내·외부 환경을 검토하였고, 출입국관리직 공무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및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향후 전문과목 도입 방향을 제안하였다



### 외국인주민정책 추진체계 모색

연구책임자 김윤희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이후 장기정착에 기반한 결혼이민자 중심의 다문화정책은 현재 통합적 관점에서 특화서비스에서 보편서비스로 변화하고 있다. 그간의 다문화가족 중심 정책적 틀 안에서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을 제외한 외국인주민의 정주환경 구축을 위한 서비스는 제외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몇 년 전부터 민간주도였던 외국인주민 지원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적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외국인주민 정책이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벗어나는 경우 외국인주민서비스는 사각지대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공존과 정주의 관점에서 전국 외국인주민서비스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통합된 총괄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장기적인 외국인정책이 계획·운영되어야 한다.



### 코로나19 이후의 국경관리 동향

연구책임자 최효원



국경은 국가안보와 사회안전에 대한 책임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국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를 겪으며 국경봉쇄와 고립주의 그리고 자국 우선주의만으로는 범세계적인 위기에 대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국가안보에 대한 논쟁이 일상의 영역까지 확대되었고, 안보의 초점을 국가에서 개인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코로나19 이후의 국경관리는 개인에게도 관심을 기울이며 인간안보와 국제협력,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추세를 보인다.



### 중국과 일본의 재외동포 정책을 통해 본 한국의 재외동포 정책 시사점

연구책임자 송석원 공동연구자 객재석



중국의 화교에 대한 지원, 유치 정책을 국가적 차원의 주요 업무라는 관점에서 추진하고 있다. 일본 역시 일제인에 대한 지원 정책을 공공과 민간 부문의 협력 아래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의 최고 지도자의 관심이 변함없이 높고, 따라서 적지 않은 인력과 예산이 재외동포 지원에 투입되고 있다. 동시에 재외동포가 축적해온 자료를 박물관 등의 형태로 집대성해 국민과 동포 상호 간의 이해를 높이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교육사업 실적



# 03. 교육사업



## 교육사업 추진 실적

우리 연구원은 이민정책에 대한 국내·외 이해증진 및 관련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훈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상별 맞춤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공무원, 민간활동가, 국내 체류외국인, 대학(원)생 교육을 지속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입국 초기 유학생, 밀집지역외국인, 외국인연예인이 한국사회의 법과 질서, 생활정보 등 정착을 위한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기적응프로그램 강사 보수교육 및 컨설팅도 수행하였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한국의 이민동향 및 이민정책과 관련된 교육기획 및 교육내용의 전문성을 갖추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적인 네트워크 구축하면서, 교육과정 개발 및 강사양성과 같은 교육 인프라를 마련하는 등 이민정책 교육사업의 중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기본 교육사업

| 연번 | 구분       | 교육명  | 일자                       |
|----|----------|--|--------------------------|
| 1  |          | 서울시 공무원 대상 문화 다양성 이해교육 (성동문화재단1차)            | 2021.7.13.               |
| 2  |          | 서울시 공무원 대상 문화 다양성 이해교육 (성동문화재단2차)            | 2021.8.10.               |
| 3  | 공무원 교육   | 서울시 공무원 대상 문화 다양성 이해교육(마포구청)                 | 2021.9.29.               |
| 4  |          | 서울시 공무원 대상 문화 다양성 이해교육 (서울관광재단)              | 2021.11.29.              |
| 5  |          | 서울시 공무원 대상 문화 다양성 이해교육 (서울시 및 자치구 외국인 담당공무원) | 2021.12.2.               |
| 6  |          |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1차                 | 2021.5.13.               |
| 7  | 민간활동가 교육 |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2차                 | 2021.6.17.               |
| 8  |          |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3차                 | 2021.10.27.              |
| 9  |          | 결혼이민여성 글로벌 인재양성 워크숍                          | 2021.3.14.               |
| 10 | 체류외국인 교육 | 서울시 외국인주민회의 역량강화교육(상반기 2회)                   | 2021.4.27.<br>2021.4.29. |
| 11 | 후속세대 교육  | 차세대 이민정책 아카데미 (총 6차시)                        | 2021.12.20.<br>~12.21.   |

수탁  
교육사업

| 연번 | 구분      | 교육명                                    | 일자                    |
|----|---------|--|-----------------------|
| 1  |         |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br>(1지원단)                 | 2021.1.~12.           |
| 2  | 사회통합 교육 |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br>강사보수교육(총 22차시)         | 2021.11.24.<br>~12.2. |
| 3  |         |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br>강사 컨설팅(총 26회 / 1인당 2회) | 2021.12.6.<br>~12.17. |



공무원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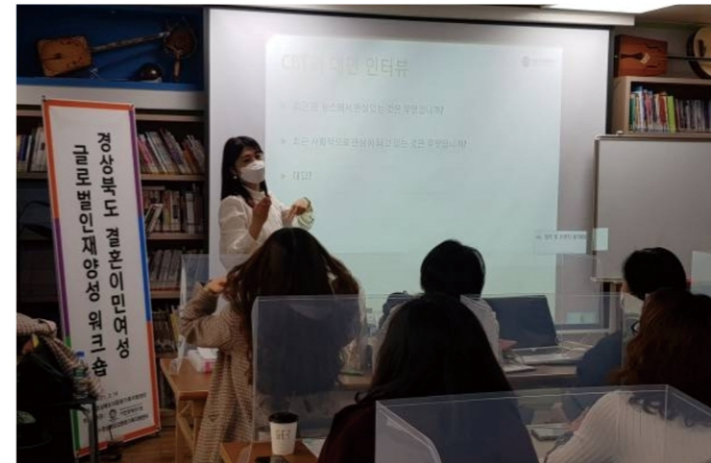
서울시 공무원  
대상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민간활동가  
교육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실무자  
전문성 향상 교육

체류외국인  
교육



결혼이민여성  
글로벌 인재양성  
워크숍

## 협력사업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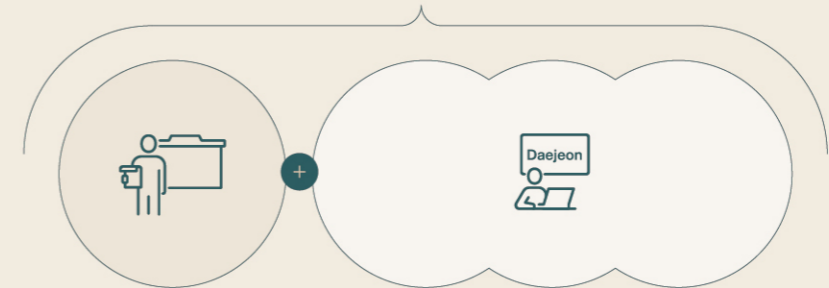
### 국내 협력사업



### 국제 협력사업



## 2021년 이민정책연구원 MOU 체결



한국이민학회

대전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  
대전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전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덕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4. 협력사업



## 국내 협력 추진 실적

우리 연구원은 이민정책 연구와 교육의 허브 역할을 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 이민정책 현장 전문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등 이른바 <민-관-학>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질 높은 이민정책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기반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특히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이민정책 개발 중요성을 주목하고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서울시, 영등포구, 경상북도 등),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연구원은 이러한 협력관계를 통해 추후 지역현실과 현장에 기반을 둔 실용적 연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 국내 협력사업

| 연번 | 구분           | 교육명  | 일자                                     |
|----|--------------|--|--|
| 1  |              | 법무부, 수요포럼 공동개최(1~3차)                         | 2021.1.6.<br>2021.1.20.<br>2021.2.3.   |
|    |              | 통계청, 외국인 관련 통계 등록부 구축 간담회·자문                 | 2021.3.19.                             |
| 3  |              | 법무부 이민통합과 본원방문 협력사업 논의 간담회                   | 2021.4.26.                             |
| 4  |              | 인구T/F, 외국인분야 자문 수행                           | ~T/F종료시까지                              |
| 5  | 정부기관 협력      | 경상북도 미래전략단, 국제(도시)화 기본계획 자문을 위한 간담회          | 2021.5.3.<br>2021.5.11.                |
|    |              |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본원 방문 간담회                     | 2021.5.7.<br>2021.8.26.                |
| 7  |              | 서울시, 외국인주민회의 분과회의                            | 2021.5.7.<br>2021.8.26.<br>2021.10.26. |
|    |              | 영등포구 글로벌 지식포럼 2021                           | 2021.11.16.                            |
| 9  |              | 국제보건의료재단, 외국인근로자 백신 수요조사 및 정보책자 홍보           | 2021.2.18.                             |
| 10 | 국내 네트워크 활동   | 한국이민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연구원 세션구성 및 후원               | 2021.4.2.                              |
| 11 |              | 한국이민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공동주최 및 후원                   | 2021.8.12.<br>~8.13.                   |
| 12 |              | 한국이민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세션구성 및 후원                   | 2021.8.27.                             |
| 13 |              | 한국이민학회, 공동세미나 개최                             | 2021.9.17.                             |
| 14 | 유관/MOU 기관 협력 | 연구교육실-서울시외국인다문화담당관 MOU 체결                    | 2021.4.21.                             |
| 15 |              | 연구원-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MOU 체결                        | 2021.6.10.                             |
| 16 |              | 연구원-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MOU 체결                        | 2021.8.11.                             |
| 17 |              | 연구원-한국이민학회 MOU체결 및 세미나 개최                    | 2021.9.17.                             |
| 18 |              | 연구원-대전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 대전지역 5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MOU 체결 | 2021.11.4.                             |
| 19 |              | 한국영상대학교, 돌봄인력 유입관련 자문                        | 2021.4.30.                             |
| 20 | 기타           | 제1회 이민정책연구원 대학(원)생 대상 이민정책연구 논문 공모전          | 2021.5.~12.                            |
| 21 |              | 법사위 박성준 의원실, 연구원 방문 간담회                      | 2021.9.14.                             |

## 국내 수탁 협력사업



| 연번 | 구분     | 교육명                                | 일자          |
|----|--------|------------------------------------|-------------|
| 1  | 정부기관협력 | 법무부, 제14회 세계인의 날 기념 이민정책포럼         | 2021.6.2.   |
| 2  |        | 법무부, 출입국관리직 시험과목개편 국민여론 수렴을 위한 간담회 | 2021.7.~12. |

# 04. 협력사업



## 국제 협력 추진 실적

우리 연구원은 국제기구와의 협정을 근거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이민정책에 관한 국제협력을 매년 활발히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연구원과 IOM이 대규모 포럼 등 행사를 공동기획하고 개최하는 등 가시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제14주년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와 공동으로 이주-사회통합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세계 이주인의 날을 맞이하여 서울시,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와 공동으로 제34회 서울타운미팅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활동 일환으로, 연구원은 이주&메트로폴리스 관련 세계 전문가 네트워크인 메트로폴리스 프로젝트의 아시아 사무국 역할을 맡아 아시아 사무국 공동으로 메트로폴리스 아시아 2021 웨비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행사 외에도, 연구원은 다수의 국제기구(유엔대테러사무국(UNOCT), 유엔문명간연대(UNAOC)) 등과의 온-오프라인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이민정책의 현안과 주요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 국제 수탁 협력사업

| 연번 | 구분                 | 교육명                              | 일자                 |
|----|--------------------|----------------------------------|--------------------|
| 1  | 국제기구협력             | IOM 베트남대표부와 마이크로소프트 수탁사업<br>공동수행 | 연속사업,<br>~2021.10. |
| 2  | 유관/<br>MOU<br>기관협력 | 라오스 출입구 행정 역량강화사업                | 연속사업,<br>~2022.5.  |



## 국제 협력사업

| 연번 | 구분                 | 교육명  | 일자  |
|----|--------------------|--|---|
| 1  |                    | IOM한국대표부 신임대표 본원 방문 간담회  | 2021.3.3.   |
| 2  |                    | IOM 신임 한국대표 이민정책 간담회   | 2021.3.24.  |
| 3  |                    | IOM 공동주최 '제14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 세미나   | 2021.5.7.<br>~5.22.   |
| 4  |                    | IOM 70주년 기념 세계이주보고서 협력방안 협의  | 2021.4.7.<br>2021.6.23.<br>2021.8.30.   |
| 5  | 국제기구<br>협력         | IOM한국대표부 분기별 정례회의  | 2021.3.24.<br>2021.5.10.<br>2021.6.9.   |
| 6  |                    | 연구원-UN대테러사무국-국가안보전략연구원<br>공동발간사업 협의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   | 2021.4.15.<br>2021.5.4.<br>2021.6.17.<br>2021.7.21.<br>2021.8.26.<br>2021.8.31. |
| 7  |                    | UNAOC&IOM PLURAL+2021 심사상영회 개최   | 2021.11.30.   |
| 8  |                    | 연구원-IOM 한국대표부- 서울시, IOM 70주년<br>기념행사 공동개최(제34회 서울타운미팅)   | 2021.12.10.   |
| 9  | 글로벌                | 메트로폴리스 아시아 웨비나 참여(1회)  | 2021.1.28.  |
| 10 | 네트워크<br>활동         | 메트로폴리스 아시아사무국 운영회의(2회)   | 2021.1.7.<br>2021.1.14.   |
| 11 | 유관/<br>MOU<br>기관협력 | 독일 프랑크푸르트 괴테대학 연구협력  | 2021.2.9.   |
| 12 |                    | OECD-ADBI-ILO 아시아 노동이주 라운드테이블<br>발표 및 토론   | 2021.4.7.<br>~4.8.  |
| 13 |                    | Intergovernmental Consultations in migration,<br>asylum and refugees (IGC) virtual meeting<br>참석 | 2021.6.21.  |
| 14 | 기타                 | 유엔훈련조사연수원 제주국제연수센터(UNITAR<br>CIFAL) 제주 국제포럼 패널 참석  | 2021.6.26.  |
| 15 |                    | 북경언어대학교(BLCU) 국제졸업식 원장 축하  | 2021.7.6.   |
| 16 |                    | UNOCT-IOM 등 BSM-ROK 전문가그룹 미팅 참석  | 2021.10.15.<br>~10.22.  |

### 국내 협력사업



연구교육실-서울시외국인다문화담당관 MOU체결



연구원-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MOU체결



연구원-한국이민학회 MOU 체결 및 세미나



영등포 글로벌 지식포럼

### 연구원 행사



제1회 이민정책연구원 대학(원)생 대상 논문 공모전

### 국제 협력사업



IOM한국대표부 신임대표 방문 간담회



2021년 제34회 서울타운미팅



제14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 세미나

# 2022년 연구원 사업 방향

---



연구·교육·협력 사업 방향



Migration Research & Training Centre  
이민정책연구원  
Partner Organization of IOM

# 연구·교육·협력 사업 방향



## 연구사업

2022년 연구사업은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23-2027) 수립의 방향 설정을 위한 정책의제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향후 5년간 이민정책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외적 환경을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하면서 2022년의 중점 연구영역을 설정한다.

2022년의 연구사업의 중점주제 영역은 크게 '새정부의 이민정책 방향', '인구문제에 대한 대응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재외동포 정책의 재정비와 내실화', '합리적 이민정책 추진체계', '이민자 사회통합정책과 난민정책의 구체화', '이민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공무원 역량강화'로 구성한다.

- 01** → **새 정부의 이민정책 방향**

향후 5년의 새 정부 집권기간 동안 정부가 주목할 만한 이민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23-2027)에 담을 수 있는 혁신적 중점과제를 제시한다.
- 02** → **인구문제에 대한 대응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1~4기(2019~2022) 인구TF에서 포함하고 있는 인구문제 해결의 한 방법으로서 이민정책 활용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 적용가능한 정책대안을 발굴한다. 인구감소 및 구조변화는 지역인구소멸위기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이민정책을 통한 지역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방안을 연구한다.
- 03** → **재외동포 정책의 재정비와 내실화**

국내체류 외국인 중 외국국적 귀환이민동포의 비중이 높아 동포 대상 이민정책의 제도와 사회통합정책 프로그램들이 좀 더 정교하게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 이민정책 맥락에서의 재외동포정책의 맥락을 짚고 개선방안 제시한다.
- 04** → **합리적 이민정책 추진체계**

2020년 <데이터기반 행정효율화> 법과 관련 기본계획 수립(2021-2023) 후 범정부 차원에서 증거기반 정책 수립-이행-평가에 관심이 집중되며 예산과 조직이 증원되고 있는바, (빅)데이터를 활용한 합리적 이민정책 기반 강화 방안을 연구한다.
- 05** → **이민자 사회통합정책과 난민정책의 구체화**

이민정책의 성패는 내·외국인 간 사회통합의 수준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사회통합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기금 등)을 모색하는 연구를 추진한다. 또한 사회통합 측면에서 그 동안 간과되어 온 난민(인정자)의 지역사회 정착과 통합을 위한 정책적 개선과제를 제시한다.
- 06** → **이민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공무원 전문성 향상**

국내 체류 외국인 수 증가와 유형의 다양화로 인해 외국인 및 이민자 업무 일선에 있는 담당 공무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바,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인 및 이민자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방안을 연구한다.

## 교육사업

### 기본교육

본원은 설립목적에 따라 이민정책에 대한 국내·외 이해증진 및 관련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훈련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의 이민동향 및 이민정책과 관련된 교육기획 및 교육내용의 전문성을 갖추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적인 네트워크 구축하면서, 교육과정 개발 및 강사양성과 같은 교육 인프라를 마련하는 등 이민정책 교육사업의 구심점 역할을 해오고 있다. 특히 2019년 이후 체계화한 대상별 맞춤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공무원, 민간활동가, 국내 체류외국인, 대학(원)생 교육을 정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일반시민교육을 확대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내국인 인식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 수탁교육

본원은 법무부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제1지원단으로 입국 초기 유학생, 밀집지역외국인, 외국인연예인이 한국사회의 기초법·제도, 생활정보 등 정착을 위한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22년도에는 조기적응프로그램 강사 보수교육 및 컨설팅 등을 통하여 전문강사의 역량강화에 보다 집중할 계획이다.

## 협력사업

본원은 국내유일의 이민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국내외 유관기관(정부, 학계, 민간 등)과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2022년 국내협력사업은 정부(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국회,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법무부를 비롯한 이민정책 추진 중앙부처 및 국회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실질적인 정책개선방안과 국회의 입법방향을 제안한다. 이민정책 추진에 있어 지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구체화한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27개 기초자치단체), 서울시 등 기존에 협력관계를 구축한 지방자치단체 외에도 대구, 경북, 제주도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도 협력하여 지역기반 이민정책 연구를 심화하는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또한 연구원을 중심으로 국내 이민정책 연구기관 및 학회와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하는 등 이민정책 싱크탱크의 허브로서 기능을 강화한다.

2022년 국제협력사업은 IOM, UNHCR 등 이민과 난민에 관한 주요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중심으로 한다. 이에 2022년에는 '2022 이민정책연구원-IOM의 국제이주동향과 한국이민정책동향', '2022 이민정책연구원-UNHCR 국제난민동향과 한국난민정책동향'등 국제기구와의 연계 정례회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 외에도 국제적인 연구기관과의 협력연구 등을 발굴하여 연구원의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고 한국 이민정책의 국제적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 연구원 소식보기

이민정책연구원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이민정책동향 (WEEKLY REPORT) 구독신청

이민정책연구원에서는 국내외 이민관련 뉴스와 정책 및 연구동향, 세미나 소식 등을 모아 매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민정책동향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contact@mrtc.re.kr](mailto:contact@mrtc.re.kr)로 정기구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mrtc.re.kr](http://www.mrtc.re.kr)



트위터  
[www.twitter.com/  
MRTC\\_re\\_kr](https://www.twitter.com/MRTC_re_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  
MRTC.RE.KR](https://www.facebook.com/MRTC.RE.KR)



카카오톡 채널찾기  
@mrtc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남로 93 양천빌딩 별관 2층, 3층  
T 02-3788-8000 F 02-3788-8098 H [www.mrtc.re.kr](http://www.mrtc.re.kr)